

다산포럼



김태희
역사연구자·다산연구소 대표

정치적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 있다. 그것은 헌법에 담겨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이 두 가치가 위기에 직면했다.

민주주의란 논쟁적인 개념이지만, '다수의 지배'를 핵심 원리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다수의 폭정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소수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배에서 다수-소수 관계의 역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수의 결정은 바로 '선거'를 통해 이뤄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선거는 승패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현재 집권자가 선거에 패배해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고, 다음 선거에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다. '최강자의 법칙'에 따라 집권자를 정하는 체제는 평화로운 권력 교체를 보장할 수 없다. '다수의 법칙'은 다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설득을 주된 도구로 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화적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공동체의 약속, 폭력의 배제

막기 위한 것이다. 권력분립을 전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권력 구성을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법적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것, 사법적 구제를 보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구성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결정하게 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행위가 최근 발생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서였다. 평온한 12월 3일 밤, 실제적·절차적 요건이 미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으며, 비상계엄이 허용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어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사건도 충격적이다. 군대 동원에 실패하고서 거리의 무법자를 동원한 셈이다.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니 그 무모함에 놀랍고, 저항권 행사라 강변하는 것엔 어처구니없다. (저항권이란 국가기관의 헌법침해 행위가 중대·명백한데도 다른 합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때,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비폭력을 원칙으로 한다.)

12·3 이후 나타난 파시즘 전조 현상은 우리 사회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극우 유투버들은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는 데 열을 올리며 혐오를 조장하고 공격성을 자극하여 우리 사회를 폭력적인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마침 지난주 '시사IN'(910호)에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기사가 실렸다. 여론조

사 결과는 보수층 내의 분열을 보여주었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40% 정도였다. 이들은 다른 보수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용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과 극우 유투버 시청 시간이 길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시사IN' 기사가 시사하듯, 현 상황을 단순히 양 진영이 대립하는 틀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극단적 세력을 보수 전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를 자임하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언론 패널리명백한 법법행위 서부지법 폭력을 두둔하거나 적극 비판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일까. 자칫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단초를 제공할까 걱정이다. 양당 독점체제와 진영논리는 우리의 관점과 선택을 가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 전모에 관해 아직도 의문이 많다. 하지만 그 사실은 명백하고, 위헌·위법성은 중대하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폭력을 촉발하고 근거 없는 의심으로 선거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취임 때 선포한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추구했다. 그것은 폭력을 예정한다.

공동체의 약속 가운데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다. 바로 폭력의 배제다. 불법적 폭력을 선포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적 경쟁 물이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정치공동체의 평화를 염원하는 다수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청춘 특특

삶을 부둥켜 안는 것



박지인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년

죽음이 이렇게 가까운 것인지 몰랐다. 내가 겪은 죽음은 오래된 건물에 설치된 임시 벽 너머였다. 그때 나는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설레면서도 긴장했다. 잘살아 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은 나에게 아주 먼 얘기였고, 내가 겪기엔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다.

자취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집에 누수가 생겨 집을 비우고 본가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몇 주 지나 필요한 짐을 챙기러 자취방에 들렀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순간부터 풍기는 냄새와 집 안에 갑자기 생겨난 벌레들에 이상함을 느꼈다.

설마 하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옆집에 사는 청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어진 장마와 높은 기온에 부패가 심했다. 예상은 했지만, 상황이 타치니 놀라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히려 차분해졌다. 최초

발견자로 진술하고 나서 짐을 챙겨 본가로 돌아왔다. 그렇게 여름방학은 흘러갔다.

그날 이후 그해 여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근로 장학 활동을 하느라 반복적으로 출퇴근만 반복했고 조금 여유가 생기는 날엔 잠만 계속 잤던 것 같다. 조금이나마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누군가의 죽음을 가까이 느낀 후유증이었다. 사실 이웃 간의 따스한 정은 사라진 지 오래다. 같은 벽을 공유하며 가장 가까이 사는 옆집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에게 친절히 다가가 인사를 나누기엔 낯선 이에게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너무 무심했던 것은 사실이다. 떠난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죄책감이 생기기도 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그가 덜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해가 지났고 그 일에는 무뎠겠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누군가의 비보는 언제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동시에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살아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 자신을 베풀기 위해 내뿜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이 세상에 쓸모를 찾지 않아도 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목숨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쩌면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은 사실 누구보다 간절히 삶을 부둥켜안고 있을 수 있다.

자살은 '충동적 선택'이 아니다. 그 생각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알아챌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눈길과 관심이다. 물론 자신의 마음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재를 살아가느라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나의 고통은 어떤 시절의 결핍이라든지 아직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에서 시작됐든지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시작된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 불행해야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울감과 불안감의 증상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오로지 나의 힘으로 극복하기엔 버거울 수 있다. 병원이나 약이 아니라도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주변을 잘 살피고 곁에 머무르는 것이 힘든 날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의지해야 한다.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구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서둘러 진심을 전한다. 한때 짙거나 같은 벽 하나를 공유했던, 이젠 세상을 떠난 이웃과 스르리 너머로 응원하던 배우의 명복을 빈다. 부디 안온하길 바란다.

기고

광주의 민주 시민의식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전영원
시민플랫폼 나들 공동대표

시민플랫폼 '나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을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광주사람들은 '시민플랫폼 나들'이라는 새로운 시민단체를 세웠다. 그동안 시민운동이라면 후원회비 정도만 냈거나 시민단체 가입조차 한 적 없는 광주시민들이 세월호 이후의 '나'와 '세상'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각성과 함께 사단법인의 규모가 아닌 작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든 것이다.

나들의 연간 활동 중에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이 있다. 이는 창립 이듬해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코로나19 당시에도 쉬없이 이어온 활동이다.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버리는 현실 속에 그래도 광주를 떠나지 않고 공익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작년에는 지역 청년 열 명을 발굴하여 교통비 정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민플랫폼 나들의 회원 활동이 정체가 되어 세대교체가 안되고 탈퇴자가 속출하면서 예산이 줄어들다보니 상근 실무자를 들일 형편이 안 되는

속에서도 환경운동가, 마을활동가, 인권활동가, 문화기획자를 지향하는 지역 청년들은 눈에 띄었다. 그래서 2025년 정기총회에서 나들 회원들은 실무자 채용을 포기하는 대신 청년 지원만큼은 포기할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다.

사실 지원받은 청년들은 나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 애 없애 보니 주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연말에 아주 쿨하게 이별을 해왔다. 그런데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단한 반전이 일어났다. 작년에 지원받았던 청년들 중에서 네 명, 재작년 지원 청년 한 명이 나들 일반 활동에 기웃대더니 정식으로 회원이 되었고 청년대표의 권유에 의해 '청년이사'라는 명함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진실로 반갑고 고마운 일인지만 이 사람들은 머리를 썼다. 일반회비가 1만원이면 이사회비는 최소 3만원 이상 납부해야 하기에 일부러 '청년이사'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일반회비만 내도 되게 했으며 그 비용이 부담된다면 일촌을 맺어 대신 내겠다는 이사들도 나타났다.

2025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인준을 받은 청년들은 기존 회원들 틈에 끼어서 올해 사업안을 놓고 토론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뭔가를 착각한 아버지랄 뎌는 회원의 엉뚱한 발언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 긴장이 풀렸다가, 과연 시민운동체의 사업다운가 아닌가 하면서 심각한 논쟁이 붙을 때는 살짝 굳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나 또한 돈보기도도 잘 보이지 않는 예산안 숫자 때문에 회의 내내 버럭냈는데 20대 청년들로서는 이 모든 것이 아주 낯선 풍경이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회의 중에 특별한 일도 있었다. '3년상을 치르는 세월호 시민상주' 활동에 전념하는 회원들이 총회 전 이사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사업을 제안했다. 그동안 4·16연대에서 광주 시민상주팀의 세월호 추모 사업에 일정 비용을 지원했는데 11년째인 올해부터는 광주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단체가 비용 부담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다.

이미 예산에 맞게 올해 사업안을 상정했는데 느닷없는 특별 사업을 하지는 제안에 회의장은 돌연 활기가 넘치며 시끄러워졌다. 청년들은 이날 총회에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이다. 다른 사업안은 대중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단어도 잘 안 떠올라 해매던 어르신 회원들이 미리 의논한 적도 없는 연대사업안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시민단체 회의 과정을 지켜본 청년들에게 광주 시민 의식이 불 스며들 듯이 조금씩은 스며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2014년 시민플랫폼 나들을 만들었을 당시 주된 연령층이었던 50대들은 20·30대 회원들과 회의 과정을 통해 '퍼실리테이터'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의 기법을 알게 됐다. 나이 많은 광주시민들이 더 어린 시민들 덕에 누구나 고르게 발언하는 회의 기법을 터득했고 큰소리 내지 않고도 모두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 스며들 듯이 서로가 스며드는 것, 세대를 넘어 광주의 시민 의식이 자연스레 연결되고 이어지는 활동 현장을 짚어본다.

社說

'검수완박' 법 틈새 보완해 입법 취지 살려야

이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4조 2항)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정 의원측의 주장을 인용한 판단이다.

실제 광주지검 A검사가 정 의원 등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애초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때에 해당한다'는 같은 법의 예외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단 광주지검은 정 의원 사건을 제기 소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

된 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새로운 증거 없이 검찰이 단순 절차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제기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재기소 시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정 의원의 경우 첫 사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검수완박' 법에 대해 그동안 보완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으나 검찰의 기소권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돼 우려스럽다. 검찰과 법원은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입법부는 차체에 법률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법의 미비점이 범죄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아차 취업사기 의혹 철저히 수사로 근절하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또다시 취업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제보로 기아차 광주공장 관련 취업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B씨가 1년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인사비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넸지만 취업도 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해 제보했다.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B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고 경찰의 수사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기아차 광주공장의 취업사기는 의혹만으로도 지역사회의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20년 전 대규모 채용비리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005년 검찰의 수

사로 120명이 채용비리로 부정하게 입사했던 사실이 밝혀져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노조 간부와 회사 임직원 등 19명이 구속되는 등 34명이 사법처리됐다. 지역사회에선 청탁자가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네면 노조 간부와 회사 임직원을 통해 채용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줬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경제를 대표하는 고액 직장이라 취업사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계약직 생산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돼 온 전례가 취업사기를 자극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취업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에 그치지 말고 회사측 채용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 보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無等鼓

세계 기념일은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 세계가 뜻을 모아 함께 해야 할 이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의미로 유엔이 지정한 날이다. 유엔은 회원국들과 논의해 전 세계적으로 기념일을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구적 공동체의 목표가 세계 기념일이기도 하다.

세계 사회 정의의 날(2월 20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세계 시의 날·국제 누르즈의 날(3월 21일),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 국제 반성의 날(4월 7일), 세계 언론자유

의 날(5월 3일), 세계 사별여성의 날(6월 23일),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8월 19일), 국제 민주주의의 날(9월 11일), 국제 장애인 날(12월 3일) 등 1년 중 기억할 다양한 기념일도 많다.

최근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해제를 의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 날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 입법부의 책임·역할을 상기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월담절'이라는 명칭으로 기념하자는 말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까지 경찰의 봉쇄를 피해서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 계엄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징적 행동을 펼친 날을 기념하자는 것이다.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의 허리를 잡고 영명이를 밀어준 시민들의 바람, 선거로

집권한 뒤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발인 친위쿠데타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짧은 시

간에 저지른 역사, 아이들 가슴 응원봉을 흔들며 억속한 거대 담론보다 평범한 일상 지키기 위해 축제 같은 'K집회'를 즐긴 공동체 문화를 기억하자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연다. 선고는 약 2주 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월담절을 기념하며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지을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회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